

한선 프리미엄 리포트

Hansun Premium Report

2,000원으로 내 마음같은 '정책후원' 하기

☒ 문자 한 통 #7079-4545

182회 공동체자유주의 세미나 주요 내용

주 제 : 국제비교를 통해서 본 조세정책 발전방향
발제자 : 이영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
일 시 : 2015년 4월 16일 오전 7시30분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 요약 >

☞ 4월 16일 182회 공동체자유주의 세미나는 이영 교수를 연사로 초청해 조세정책 발전방향을 논의했습니다.

■ 국가별 조세 규모와 구성, 복지 규모와 구성은 각기 다르다. 이를 결정하는 중요 요인은 ▲경제 규모 ▲고령자 수 ▲인구 등 세 가지다. 잘 살고 소득이 높아지면 전체 재정규모가 커지는 경향이 있다. 고령자 수와 인구 규모는 조세수입 규모에 있어 양의 상관관계를 가진다. 국가규모가 클수록 조세부담률이 작아지는데, 세금을 내고 자신이 받는 혜택이 적어 조세저항이 크기 때문이다. 또 한 가지 중요 요소는 그 국가가 어떤 전통을 가졌느냐다. 공동체적 성향이 강한 국가라면 국가 재정 규모가 커지기 마련이다. 우리나라는 고령화도 빨리 진행되고 있고, 인구 규모는 큰 편이다. 또 공동체적 성향도 강하다. 이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우리나라의 복지모형의 목표지점을 북구와 독일의 중간으로 설정하면 좋을 것 같다.

■ 우리나라의 법인소득세(3.7%) 비중은 OECD 평균(3.0%)보다 높다. 주요 선진국들은 낮은 수준의 법인소득세를 유지해 기업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와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는 낮은 법인세율을 유지하여 기업 활동 강화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우리나라는 사회보험료 중 기업이 부담하는 비용이 낮은 편이다. 국민연금만 근로자부담 4.5%, 기업부담 4.5%로 총 9%다. 연금 소득을 높여야 하고, 국민연금 재정 안정을 위해서도 국민연금의 기업 부담분을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 개인소득세는 3.5%로 매우 낮은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 OECD 평균은 8.5%, 핀란드·스웨덴은 12%, 독일은 9%대다. 우리나라의 현재 면세자 비율은 34%인데 근로소득공제는 줄이고 인적공제는 늘리면서 전체 공제 부분을 줄여야 한다. 또한 최고소득세율을 40%, 1억 원으로 조정해 고소득자의 세금도 많이 거둬야 한다.

■ 주요 국가들의 복지재정지출 규모를 보면, 북구는 30%, 독일은 그 보다 5%p 정도 낮다.

독일·프랑스는 연금(사회보험료)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 북구보다 국가 규모가 커 조세저항이 크다 보니 사회보험을 통해 복지체제를 구성한 것이다. 덴마크·핀란드는 사회서비스 쪽이 다른 국가에 비해 2배 정도 된다.

■ 사회서비스는 모든 사람이 접근 가능하게 해야겠지만, 문제는 자원 조달 방법이다. 스웨덴의 무상보육은 부모 중 한 명이라도 근로하지 않는 시간에 아이를 맡기면 전체 개인이 부담한다. 근로시간에 아이를 맡기면 부부 총소득에서 첫째 아이는 3%, 둘째 아이는 2%, 셋째 아이는 1%의 차등이용료(sliding fee)를 부과해 재원을 조달하고 있다.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용료를 내도록 돼 있는 것이다. 민간에서 공급할 수 없는 서비스라면 무상으로 가야 하지만 대체제가 있는 경우 무상으로 하면 왜곡이 발생해 많은 비용이 들 수 있다.

■ 우리나라가 지향할 복지 모형은 북구와 독일의 중간이 적절 : 빠른 고령화, 인구 규모, 공동체 성향 고려해 조세제도 정비해야

- 최근 우리사회에서 연말정산, 법인세 등 조세정책과 관련한 논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조세논란에 너무 몰입하다 보니 큰 그림을 못 보는 것 같다. 조세정책은 개별 사안으로 다루면 누군가 손해 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

- 조세 규모와 구성, 복지 규모와 구성은 국가별로 다르다. 이를 외생적으로 결정하는 중요 요인은 ▲얼마나 잘 사는지 ▲얼마나 고령자가 많은지 ▲국가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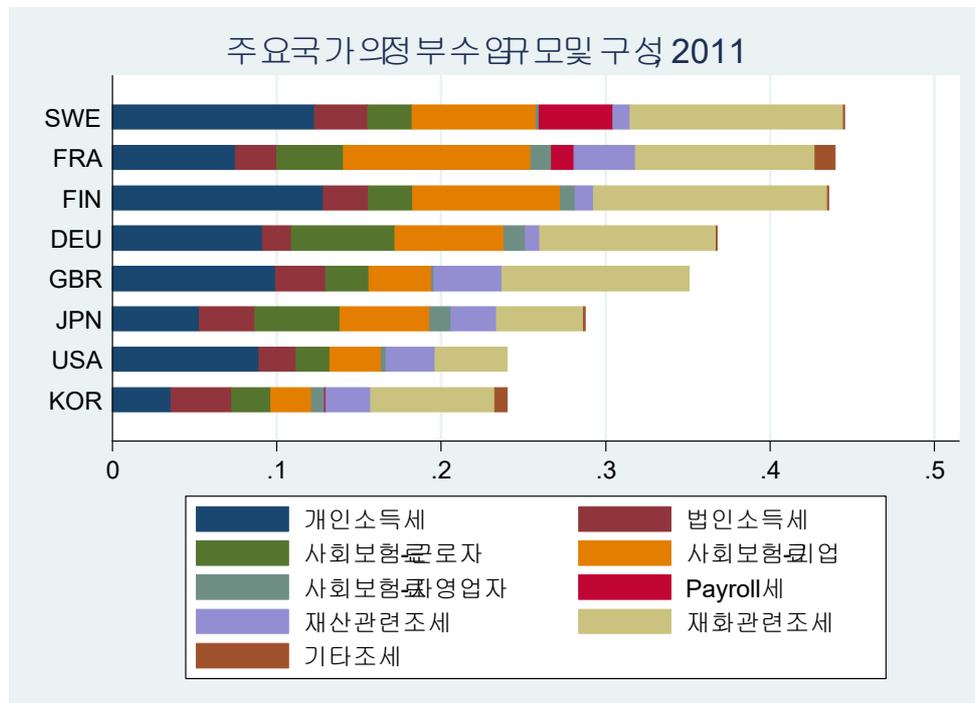
- 잘 살고 소득이 높아지면, 복지가 확대되고 전체 재정규모가 커지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매우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오히려 고령자 수와 인구규모가 조세수입 규모가 강력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진다. 고령자가 많을수록 의료, 연금 등 고령자들을 위한 복지 지출이 늘고, 이는 정부 지출에서 큰 부분을 차지한다.

- 국가규모가 클수록 조세부담률은 작아진다. 조세는 기본적으로 내가 일한 결과에 대한 대가를 뺏기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싫어한다. 조세부담률이 30%정도 되는 북구의 경우, 인구 규모가 500만 명 수준인데 정부가 무슨 일을 하는지, 내가 낸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볼 수 있어 조세저항이 적다. 반면, 미국은 우리나라와 조세부담률이 비슷한 수준이다. 국가 규모가 클수록 내가 받는 혜택이 적기 때문에 조세저항이 크고 초과부담이 커진다. 초과부담은 세금 때문에 경제행위를 바꾸면서 발생하는 효율성의 손해 비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 또 한 가지 중요 요소는 그 국가가 어떤 전통을 가졌느냐다. 어떤 철학을 갖고 국가 방향을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다. 공동체적 성향이 강한 국가라면 국가 재정 규모가 커지기 마련이다. 이 과정에서 기후도 중요하다. 따뜻한 나라에서는 공동체적 성향이 덜 발달한다. 공동체에 크게 의존하지 않아도 개인이 살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 있기 때문이다. 추운 지역에서는 긴 겨울을 이겨내려면 같이 도와야 하고, 미래 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공동체가 발달한다. 기후의 영향으로 잘 사는 국가는 대체로 북쪽에 있다. 따뜻한 나라인데도 잘 사는 경우는 제도가 이식된 경우다. 이런 요소들을 전체적으로 고려해 조세·재정 제도를 생각했으면 좋겠다.

- 우리나라는 고령화도 빨리 진행되고 있고, 인구 규모도 큰 편이다. 공동체적 성향은 강하다. 이런 부분을 고려해봤을 때 우리나라는 북구와 독일의 중간 정도로 가면 된다고 생각한다. 공동체적 성향은 북구와 비슷해 사회민주주의 모형을 지향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북구만큼 정부가 커지는 것은 힘들 것 같고, 목표지점을 독일의 중간 정도에 두면 좋을 것 같다.

■ 사회보험료 기업 부담분 올려 국민연금 재정 안정 찾아야
: 기업 경쟁력 위해 법인세는 현 상태 유지가 바람직



	개인 소득세	법인 소득세	사회 보험료 근로자	사회 보험료 기업	사회 보험료 자영업자	Payroll세	재산관련 조세	소비관련 조세	기타 조세	총재정 수입
Korea	3.5%	3.7%	2.4%	2.5%	0.8%	0.1%	2.7%	7.5%	0.7%	24.0%
United States	8.9%	2.3%	2.0%	3.1%	0.3%	0.0%	3.0%	4.4%	0.0%	24.0%
Japan	5.3%	3.4%	5.2%	5.5%	1.3%	0.0%	2.8%	5.3%	0.1%	28.7%
United Kingdom	9.9%	3.0%	2.6%	3.8%	0.2%	0.0%	4.1%	11.4%	0.0%	35.1%
Germany	9.1%	1.7%	6.3%	6.7%	1.3%	0.0%	0.9%	10.8%	0.0%	36.8%
Finland	12.8%	2.8%	2.7%	9.0%	0.9%	0.0%	1.1%	14.3%	0.1%	43.6%
France	7.5%	2.5%	4.0%	11.4%	1.3%	1.4%	3.7%	10.9%	1.2%	44.0%
Sweden	12.3%	3.2%	2.7%	7.6%	0.2%	4.5%	1.0%	13.0%	0.1%	44.5%

- 위의 표는 우리나라와 주요 국가의 GDP 대비 총재정수입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우리나라의 총재정 수입은 24%, 근간 세목은 소비세(7.5%), 법인소득세(3.7%), 개인소득세(3.5%)다. 주요 국가들과 재정수입을 비교해보면, 우리나라의 재정수입 규모와 구성은 미국과 유사하다. 독일은 36.8%로, 조금 덜 거두고 덜 쓰는 모형이다. 그 보다 10%p

더 쓰는 모형이 복구다. 총재정 규모만으로 따지자면 우리나라는 현재 재정규모를 서유럽의 보수조합주의 국가만큼 10%P 올릴지, 복구처럼 20%P 올릴지 고민하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 있다.

- 세목별로 보면 법인소득세의 비중은 OECD 평균(3.0%)보다 높다. 주요 선진국들은 낮은 수준의 법인소득세를 통해 기업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가규모가 작은 나라는 법인세율이 낮다. 홍콩, 싱가포르, 대만은 15~17%, 우리나라는 22%다. 소규모 개방경제 국가가 법인세율을 높게 잡으면 비용이 커지기 마련인데, 우리나라는 법인이 기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용이 크기 때문에 높은 편이다.

- 법인세는 기본적으로 이중과세 형태로 존재한다. 그 근거는 ▲법인이 기업과 개인기업 간의 절세 수단으로 법인을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함과 ▲법인이 누리고 있는 유한책임이라는 사회적 특혜에 대한 대가이며 ▲법인 소득을 개인이 유용하는 것에 대한 최소한의 과세 등이다. 법인을 조세정의 실현 대상으로 삼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 우리나라와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는 낮은 법인세율을 유지해 기업 활동 강화를 유도하고 개인소득세와 상속증여세를 통해 형평성을 추구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한다.

- 법인세보다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의 기업 부담분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나라는 사회보험료 중 기업의 부담 비용이 낮은 편이다. 국민연금을 보면 근로자 4.5%, 기업 4.5%, 총 9%다. 그런데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수명이 길다.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돈을 받아도 100만원 수준이다. 이걸로 노후생활하기엔 부족하다. 근로자 부담분을 올리자고 하면 연말정산 사태 때보다 심각한 일이 벌어질 것이다. 연금 소득을 높여야 하는 부분과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을 위해서 근로자 4.5%, 기업 6.0% 수준이 어떨지 의견을 제시해본다.

Pension contribution rate (% of gross earnings)		
OECD members	Employee 2012	Employer 2012
Australia	Private pension contributions only	
Austria	10.3	12.6
Belgium	7.5	8.9
Canada	5.0	5.0
Chile	28.8	1.0
Czech Republic	6.5	21.5
Denmark	Private pension contributions only	
Estonia	2.0	20.0
Finland	5.2	17.7
France	6.8	9.9
Germany	9.8	9.8
Greece	6.7	13.3
Hungary	10.0	24.0
Iceland	No separate pension contribution	
Ireland	No separate pension contribution	
Israel	3.9	3.1
Italy	9.2	23.8
Japan	8.4	8.4
Luxembourg	8.0	8.0
Mexico	Private pension contributions only	

Netherlands	17.9	0.0
New Zealand	No contributions	
Norway	No separate pension contribution	
Poland	9.8	9.8
Portugal	No separate pension contribution	
Slovak Republic	4.0	14.0
Slovenia	15.5	8.9
Spain	4.7	23.6
Sweden	7.0	11.4
Switzerland	4.9	4.9
Turkey	9.0	11.0
United Kingdom	No separate pension contribution	
United States	4.2	6.2
Korea	4.5	4.5
OECD34	8.4	11.2

- 위의 표는 공적연금 보험료를 근로자, 고용주가 각각 어떻게 내고 있는가를 정리해놓은 것이다. OECD 평균은 8.4%(근로자), 11.2%(고용주)다. 핀란드는 5.2%, 17.7%, 프랑스는 6.8%, 9.9%다. 어떤 국가는 근로자 부담이 더 크기도 하다. 경제학자들은 합리적인 측면에서 총부담률이 문제지 근로자와 법인의 부담 비율은 어떻든지 상관없다고 말한다. 임금이 중간에서 조정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실제로 근로자 부담 비율이 더 큰 국가들도 있고 적은 국가도 있다. 하지만 정책은 합리성만 갖고 보면 안 되는 측면이 있다. 정치경제학적인 부분 때문에 법인의 부담비율을 상향하는 것이 우리나라 여건상 좋다고 본다.

■ 개인소득세 올리고 면세자 비율은 낮춰야

: 인적공제 늘리면서 전체 공제 줄여야 비과세 감면 제도 취지 잘 살려

- 개인소득세는 매우 낮은 수준이다. OECD 평균은 8.5%, 핀란드·스웨덴은 12%, 독일은 9%대다. 개인소득세를 올렸으면 좋겠지만 이 역시 연말정산 사태와 같은 큰 저항이 있을 수 있다. 현재 개인소득세율은 6%, 15%, 24%, 35%, 38% 다섯 구간으로 나뉘어져 있고, 최고소득세율 과표 구간이 3억에서 1억 5천만 원으로 낮아지면서 누진세적 성격이 강화됐다.

- 면세자 비율은 10~20% 사이여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현재 34% 수준이다. 연말정산 보완대책이 나오면 50%까지 올라갈 것 같다. 공제부분 중 근로소득공제가 가장 크게 차지한다. 그렇기 때문에 인적공제(가족상황 등 인적상황을 감안해 일정액을 공제해주는 제도)가 작다. 근로소득공제는 줄이고 인적공제는 늘리면서 전체 공제 부분을 줄이는 게 맞다. 이것이 기본적인 생활과 근로를 위해 필요한 경비를 공제해 준다는 비과세감면 제도의 취지를 보다 잘 살리는 방법이다. 또한 최고소득세율을 40%, 1억 원으로 조정해 고소득자의 세금도 많이 거뒀으면 좋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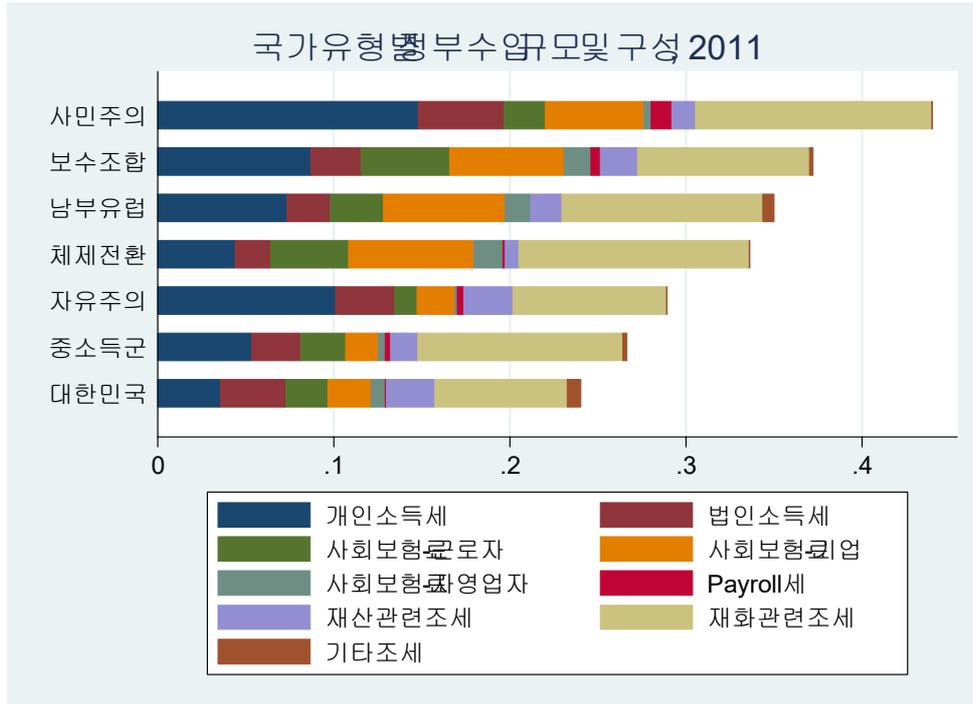
- 소비세도 올려야 한다. 우리나라 소비세는 7.3%, OECD 평균은 11.0%, 북구는

13~14%로 우리나라의 2배 가깝다. 소비세의 특징은 올릴 당시엔 조세저항이 심하지만 1~2년이 지나면 인지가 어렵다는 것이다.

year	개인 소득세	법인 소득세	사회 보험료 근로자	사회 보험료 기업	사회 보험료 자영업자	Payroll세	재산관련 조세	소비관련 조세	기타 조세	총재정 수입
1981	2.0%	1.8%	0.0%	0.2%	0.0%	0.1%	1.3%	9.8%	0.4%	15.5%
1982	2.1%	1.8%	0.0%	0.2%	0.0%	0.1%	1.5%	9.8%	0.3%	15.8%
1983	2.0%	1.7%	0.0%	0.2%	0.0%	0.1%	1.6%	10.2%	0.4%	16.2%
1984	1.9%	1.6%	0.0%	0.2%	0.0%	0.1%	1.5%	9.6%	0.4%	15.3%
1985	2.0%	1.7%	0.0%	0.2%	0.0%	0.1%	1.4%	9.1%	0.4%	15.0%
1986	2.1%	1.6%	0.0%	0.2%	0.0%	0.1%	1.3%	8.9%	0.4%	14.6%
1987	2.3%	1.9%	0.0%	0.2%	0.0%	0.1%	1.4%	8.7%	0.3%	14.9%
1988	2.4%	2.0%	0.2%	0.4%	0.0%	0.1%	1.5%	7.9%	0.4%	14.9%
1989	2.7%	2.6%	0.2%	0.4%	0.0%	0.1%	1.8%	7.6%	0.4%	15.7%
1990	3.7%	2.4%	0.7%	0.8%	0.3%	0.1%	2.2%	8.2%	0.1%	18.5%
1991	3.4%	2.0%	0.7%	0.8%	0.3%	0.1%	2.3%	7.7%	0.9%	18.2%
1992	3.1%	2.3%	0.7%	0.9%	0.3%	0.1%	2.3%	7.8%	0.5%	18.1%
1993	3.2%	2.0%	1.1%	1.1%	0.3%	0.1%	2.6%	7.6%	0.5%	18.5%
1994	3.3%	2.1%	1.1%	0.9%	0.3%	0.1%	2.7%	7.7%	0.5%	18.8%
1995	3.4%	2.2%	1.1%	0.9%	0.3%	0.1%	2.7%	7.7%	0.5%	18.9%
1996	3.4%	2.2%	1.2%	1.0%	0.4%	0.1%	2.5%	8.2%	0.6%	19.5%
1997	3.1%	1.9%	1.2%	1.1%	0.4%	0.1%	2.5%	8.2%	0.8%	19.3%
1998	3.6%	2.2%	1.5%	1.2%	0.5%	0.1%	2.1%	7.3%	0.8%	19.3%
1999	3.1%	1.8%	1.3%	1.4%	0.6%	0.0%	2.7%	7.9%	0.8%	19.6%
2000	3.1%	3.0%	1.4%	1.5%	0.8%	0.0%	2.7%	8.2%	0.8%	21.5%
2001	3.1%	2.7%	1.5%	1.6%	0.8%	0.1%	2.5%	8.6%	0.9%	21.8%
2002	2.8%	2.8%	1.6%	1.7%	0.9%	0.1%	2.8%	8.5%	0.8%	21.9%
2003	2.9%	3.5%	1.7%	1.8%	0.9%	0.1%	2.7%	8.4%	0.8%	22.7%
2004	3.0%	3.1%	1.8%	1.9%	0.9%	0.1%	2.5%	7.9%	0.8%	22.0%
2005	3.0%	3.6%	1.9%	2.0%	0.8%	0.1%	2.7%	7.7%	0.7%	22.5%
2006	3.6%	3.4%	2.0%	2.1%	0.8%	0.1%	3.1%	7.7%	0.8%	23.6%
2007	4.1%	3.7%	2.1%	2.3%	0.8%	0.1%	3.2%	7.8%	0.8%	24.8%
2008	3.7%	3.9%	2.2%	2.4%	0.8%	0.1%	2.9%	7.8%	0.8%	24.6%
2009	3.4%	3.4%	2.2%	2.4%	0.8%	0.1%	2.8%	7.6%	1.1%	23.6%
2010	3.3%	3.2%	2.2%	2.3%	0.8%	0.1%	2.6%	7.9%	0.8%	23.2%
2011	3.5%	3.7%	2.4%	2.5%	0.8%	0.1%	2.7%	7.5%	0.7%	24.0%
2012	3.7%	3.7%	2.6%	2.7%	0.8%	0.1%	2.6%	7.7%	0.8%	24.8%

- 위의 표는 과거 30년간 우리나라 조세 흐름을 정리한 것이다. 1980년 소비 관련 조세는 GDP 대비 9.8%로 현재보다 높았다. 총재정수입은 1980년대 초까지 15.5%였다가 2012년 24.8%까지 올라왔다. 국가의 재정 수입 증가 요인은 사회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 때문이다. 재화 관련 조세 감소는 중장기적으로 부가가치의 인상 등이 논의되어야 할 필요성을 의미한다.

■ 북구는 사회서비스, 독일은 연금 제도 발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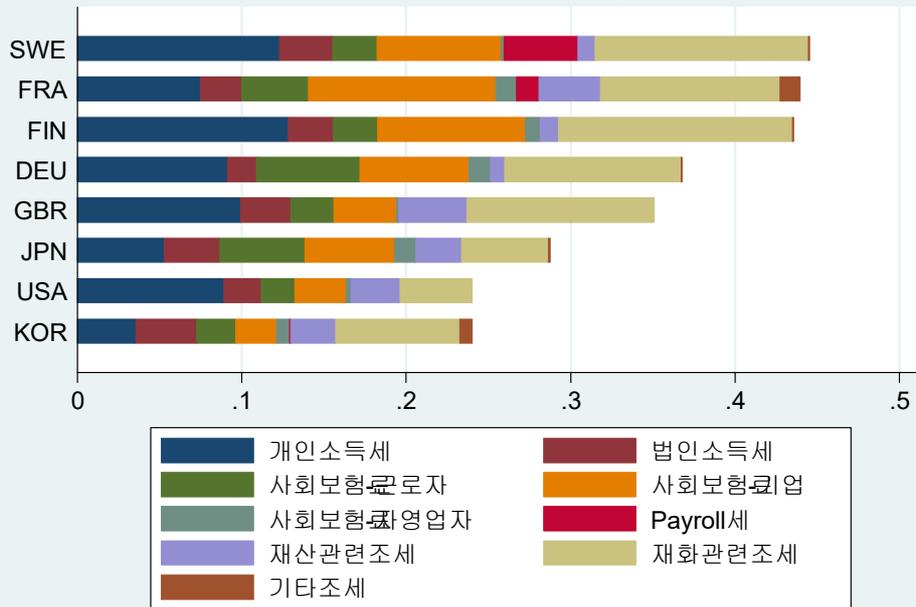
	개인 소득세	법인 소득세	사회 보험료 근로자	사회 보험료 기업	사회 보험료 자영업자	Payroll세	재산관련 조세	소비관련 조세	기타 조세	총재정 수입
한국	3.5%	3.7%	2.4%	2.5%	0.8%	0.1%	2.7%	7.5%	0.7%	24.0%
OECD 평균	8.1%	3.0%	3.3%	5.2%	1.0%	0.4%	1.8%	11.0%	0.2%	34.0%
중소득군	5.3%	2.8%	2.5%	1.8%	0.4%	0.3%	1.5%	11.7%	0.2%	26.6%
자유주의	10.1%	3.4%	1.3%	2.2%	0.1%	0.4%	2.8%	8.7%	0.0%	28.9%
체제전환	4.4%	2.0%	4.5%	7.1%	1.6%	0.2%	0.7%	13.1%	0.1%	33.6%
남부유럽	7.3%	2.5%	3.0%	6.9%	1.4%	0.0%	1.8%	11.4%	0.6%	35.0%
보수조합	8.7%	2.8%	5.0%	6.5%	1.5%	0.5%	2.1%	9.7%	0.2%	37.2%
사민주의	14.8%	4.9%	2.4%	5.6%	0.4%	1.2%	1.3%	13.4%	0.0%	44.0%

- 국가 유형별 세수 구성을 보면 북구(사민주의)는 총재정 수입이 44%다. 개인소득세와 소비 관련 조세에서 비중을 많이 차지한다. 법인소득세는 낮은 편인데 기업 활동에 대해서는 규제가 적고 자유를 보장해주고 있음을 보여준다. 대신 개인소득 단계에서 형평성을 추구하고 있다.

- 보수조합주의(일본, 독일, 프랑스, 스위스 등) 모델인 독일은 북구보다 개인소득세와 소비 관련 세금이 낮다. 반면 사회보험료는 높다. 그 이유는 북구보다 국가 규모가 크다 보니 조세저항이 심해 사회보험을 통해 복지체제를 구성했기 때문이다. 사회보험료는 자기가 내고 자기가 가져가는 시스템으로 국가 규모가 큰 곳에서 발달돼 있다. 그리스·이탈리아 등 남부유럽은 연금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 자유주의국가들은 낮은 복지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공적부조를 중심으로 한 복지재정을 개인소득세를 통해서 조달하고 있다.

주요국가의정부수입규모및 구성 2011



	개인 소득세	법인 소득세	사회 보험료근로자	사회 보험료기업	사회 보험료자영업자	Payroll세	재산관련 조세	소비관련 조세	기타 조세	총재정 수입
Korea	3.5%	3.7%	2.4%	2.5%	0.8%	0.1%	2.7%	7.5%	0.7%	24.0%
United States	8.9%	2.3%	2.0%	3.1%	0.3%	0.0%	3.0%	4.4%	0.0%	24.0%
Japan	5.3%	3.4%	5.2%	5.5%	1.3%	0.0%	2.8%	5.3%	0.1%	28.7%
United Kingdom	9.9%	3.0%	2.6%	3.8%	0.2%	0.0%	4.1%	11.4%	0.0%	35.1%
Germany	9.1%	1.7%	6.3%	6.7%	1.3%	0.0%	0.9%	10.8%	0.0%	36.8%
Finland	12.8%	2.8%	2.7%	9.0%	0.9%	0.0%	1.1%	14.3%	0.1%	43.6%
France	7.5%	2.5%	4.0%	11.4%	1.3%	1.4%	3.7%	10.9%	1.2%	44.0%
Sweden	12.3%	3.2%	2.7%	7.6%	0.2%	4.5%	1.0%	13.0%	0.1%	44.5%

- 주요 국가들의 복지재정지출 규모와 구성을 살펴보면, 재정수입 규모 격차가 복지지출의 격차다. 북구는 복지재정지출 규모가 30% 가까이 되고, 독일은 그 보다 5%p 정도 낮다.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규모보다는 구성이다. 독일, 프랑스는 연금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 덴마크, 핀란드는 사회서비스 쪽이 크다. 이들 국가의 사회서비스 규모는 각각 6.9%, 4.7%로 다른 국가에 비해 2배 정도 된다.

- 복지제도는 크게 사회보험, 공적부조, 사회서비스 세 개로 나뉜다. 사회보험은 질병, 산업재해, 실업, 장수와 같은 위험들을 사회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사회보험은 그 자체로 보편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 공적부조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구성원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다. 일례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들 수 있다. 선별적, 맞춤형으로 제공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사회서비스는 교육, 의료, 주거 등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필수적인 것을 현물로 제공하는 제도다. 제공 자체는 모든 사람이 접근 가능하게 해

야겠지만, 문제는 자원 조달 방법이다. 가령, 스웨덴의 무상보육은 부모 중 한 명이라도 근로하지 않는 시간에 아이를 맡기면 전적으로 개인이 부담하게 돼 있다. 근로하고 있는 시간에 아이를 맡기면 부부 총소득에서 첫째 아이는 3%, 둘째 아이는 2%, 셋째 아이는 1%의 차등이용료(sliding fee)를 부과해 자원을 조달하고 있다. 소득이 없으면 무료다.

-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용료를 내도록 돼 있는 것이다. 민간에서 공급할 수 없는 서비스라면 무상으로 가야 하지만 대체재가 있는 경우 무상으로 하면 왜곡이 발생해 많은 비용이 들 수 있다.

182회 공동체자유주의 세미나 질의응답

질문1 집권 여당에서도 법인세율 인상 검토 얘기가 나오고 있다. 어떻게 하면 법인 소득과 개인소득의 괴리 문제를 해결하면서 세제 개편을 추진할 수 있나?

답변 법인소득세에 관한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이미 대세가 기운 것으로 보인다. 유승민 원내대표도 법인세 인상 추진을 발표해 말리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적기만을 바란다. 우리나라 세수가 부족한 건 사실이다. 따라서 법인세 22%에서 24%로 오른다면 개인소득세도 올려 중산층 증세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 부가 증세와 패키지로 가야 저항이 적기 때문이다.

질문2 개인소득세, 소비 관련 조세를 올리고 법인세는 지금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게 발표자의 입장인데, 저항에도 지금의 조세제도를 고쳐야 하나?

답변 사실, 부가가치세 올리는 것도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개인소득세 중심으로 여러 부분을 고쳤으면 한다. 현재 근로소득공제가 70-2%로 고소득을 포함한 모든 소득에 적용되고 있는데 이를 50-0%로 낮추고 인적공제를 확대하는 것이 비과세감면 제도의 취지를 보다 잘 살리는 것이다. 또 자본이득세 강화가 필요하다. 주식에 대한 자본이득세는 현재 대주주에게만 적용되고 있는데 이를 일반주주에게 확대할 필요가 있다. 배당에 대해서는 세금이 많고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기 때문에 기업이 자본이득을 선택해 사내유보로 돌리고 있다. 자본이득세를 올리면 세수도 늘고 배당도 늘어난다.

질문3 청년의 주거 서비스 자원조달은 어디서 형성해야 하나? 셰어하우스의 경우 주택임대관리법을 통한 세제혜택 시 많이 증가할 것 같은데, 이를 공적 부분과 연결시킬 수 있나?

답변 주거 관련 서비스에 정부보조금이 들어가는 게 차등이용료(sliding fee) 정신에 부합한다고 본다. 이용료가 전체 자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는 않겠지만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면 청년 복지 사업에 약간의 정부 보조금을 만들 수 있다고 본다.

※ 이 자료가 도움 되셨다면 수신번호 #7079-4545로 한 통 꼭~ 한선을 지지해주세요.
(한 통 2,000원)